

사교육걱정없는세상
책임·공정·행복
교육 11대 공약

2022
대선

2022.1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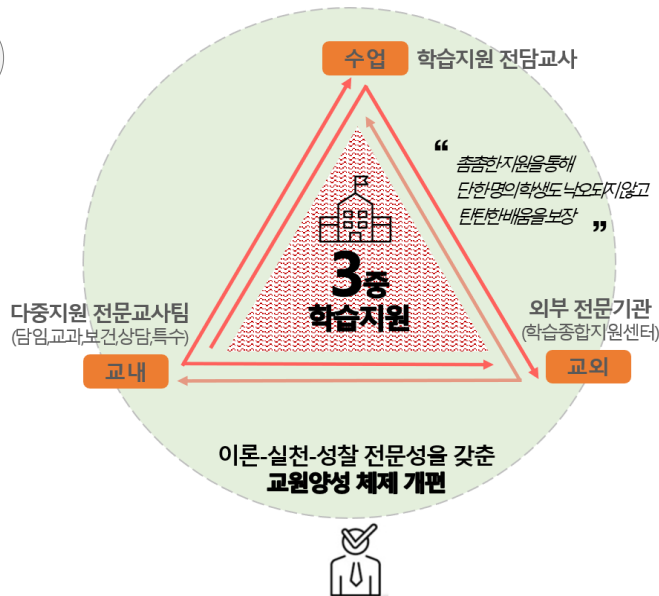
1

학교 책임교육을 위한 3중 학습지원

현황

- 현재의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3단계 지원체계(수업 내→학교 내→학교 밖)는 단계가 진행될수록 학교 내부에서 외부로 맡겨져 학교 내에서의 책임지도가 약화되는 구조
- 학습지원 대상이 최하위권에만 한정되어 지원폭이 협소하며, 정확한 진단·처방 시스템이 부실해 학습 부진이 반복·심화
- 학생별로 각기 다른 학습 속도나 준비도 등이 고려되지 않는 획일적 교육체제
- 학급당 학생수 초 21.8명, 중 25.2명, 고 23.4명(교육부, 2020 교육기본통계)으로 OECD 평균 상회, 신도시 일부는 학급당 학생수 30명 초과, 개별 학생들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촘촘한 지원이 어려움

세부내용



- **학습지원 전담교사 배치:** 학습에 어려움을 겪거나 느린 학습자를 전담하여 지원하는 정규 교사 운영
 - 매년 3월 초1~고1 모든 학생 대상으로 기초학력, 정서·행동 진단검사 실시
 - 진단 결과를 토대로 지역교육청별 정규 학습지원 전담교사 배치
- **이론-실천-성찰 전문성을 겸비한 교원양성 체제:** 질 높은 교원 확보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교사교육 모델 마련
- **생애 첫 공부단추 지원:** 초등 저학년 단계의 학습결손 문제 최우선 해소
 - 교내 문해력·수해력 전담교사가 기초학력 부진 원인을 조기에 발견, 예방하고 집중적 개별 지도
 - 초 1, 2학년 전학급 학급당 학생수 20명(2022'~) 운영 및 기초학력 100% 도달 보장
- **초·중·고 학급당 학생수 20명 수준으로(~2025),**
 - 교내 유휴 교실을 활용하여 교실 확충 및 이를 위한 예산 확보, 정규 교사 추가 배치
 - 학교 간 학급당 학생수 격차를 줄이는 것을 통한 교육격차 완화
 - 개별 학생들의 학습 속도, 흥미, 강점, 목표, 준비도 차이를 반영한 개별화된 학습케어 서비스
- **학부모 안심 홈티칭 지원**
 - 학부모가 자녀의 학습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공교육 부모플랫폼 구축,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자녀의 학습을 가정에서 간편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자녀학습도움 툴킷(가이드북, 온라인강의서비스 등) 보급
 - 가정에서 자녀 학습을 돕기 어려운 가정을 위한 공교육에서 가정학습 지원파견 서비스 제공
 - 자녀의 학습 상황에 대한 학교-가정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

기대효과

- 돌봄·학습결손으로 인한 교육격차 완화 및 사교육 경감
- 다양한 학습자 특성을 반영한 학교교육을 통해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, 신뢰도 증진

2

자기성장 평가제로 전환

현황

- '누가 더 잘 했는지' 상대적 서열에 따라 평가하던 데서 벗어나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근거해 '무엇을 얼마나 성취했는지' 평가하는 성취평가제가 중·고교 모든 교과에 도입(2016~)
- 그러나 고교 일부 과목에서 성취도와 함께 석차등급(1~9등급)이 병기됨으로써 여전히 석차 경쟁 치열
- 현행 성적표는 교과별 점수만 기록되어 있어 무엇을 얼마나 성취했고 부족한지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며 어떤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근거로 평가했는지가 불명확
- 학년별로 치르는 일제식 평가는 수업을 하지 않은 교사가 출제한 문항으로 평가를 하므로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돕는 유익한 평가로서 한계가 명확
- 한국 대학생 10명 중 8명(80.8%)은 고등학교를 '사활을 건 전쟁터'로 인식(중국 41.8%, 미국 40.4%, 일본 13.8%) (김희삼, 2017)

세부내용



- **자기향상 평가제:** 친구와의 비교가 아닌, 기존에 자신이 받았던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성장한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성취목표에 성취했는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피드백 제공
 - (전과목 성취평가제) 변별·선발 중심의 상대평가를 넘어 학생 성장을 돕는 성취평가제를 초·중·고 전과목 평가에 전면 도입하여 유익한 학교평가 체제로 전환
 - (교사별 평가) 학년별 획일적 일제평가 방식을 넘어서, 수업한 교사가 직접 평가하고, 평가 과정·결과에 대한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사별 평가 체제 도입
 - (서논술형 평가) 한 개의 정답을 찾는 객관식 평가만이 아닌, 다양한 해답을 찾는 서논술형 평가 활성화
- **학생 성장 성적표:**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근거한 성적표로 평가기록 개편
 - 교과별 점수만 기록된 성적표가 아닌, 교과별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토대로 작성된 성적표를 도입하여 학생이 '어느 부분'에서 '무엇을 얼마나 성취했는지'에 대한 유익한 평가 과정·결과 정보 제공
 - 이를 근거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 평가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가정-학교 간 신뢰 증진

기대효과

- 학생의 평가 부담 및 스트레스 경감뿐 아니라, 평가를 통해 자신의 학습 상황에 대한 학생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성장을 촉진
- 교육과정-수업-평가-기록이 일체화됨으로써 학생의 성장을 돕는 유기적이고 통합적 교육 활동이 구현
- 자녀의 학습 상황에 대한 학부모 이해도를 높이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구축

3

내 집 앞 좋은 고교를 만들기 위한 4대 전략을 추진

현황

- 고교 교육과정운영비, 학생 1인당 39만원 vs 1,187만원 천차만별(대전 예술고생 39만원/경북 과학고생 1,187만원, 30.4배 차이, 학교 유형 같아도 지역 따라 2~7배 이상 격차 발생)
- 2025년까지 자사고·외고·국제고 일반고로 전환 선언, 해당 학교측 법적쟁송 제기로 이전투구
- 자사고·외고·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되어도 영재학교·과학고가 고교서열의 정점에 위치
- 소수의 특권학교로 교육불평등 유지하느냐 모든 고교를 좋은 학교로 만드느냐 선택해야 함.

세부내용

- 2025년까지 자사고·외고·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 및 평준화 정책 완수
- 영재학교·과학고 위탁교육 체제 전환 등 영재교육 정상화 방안 추진
- 고교학점제 안착으로 내 집 앞 좋은 고교, 모든 고교의 국민 만족도 제고
- 고교생 1인당 교육과정 운영비 상향 평준화

기대효과

- 다양한 학습자 특성을 반영한 학교교육을 통해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, 신뢰도 증진
- 초·중학생의 고입 경쟁 및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해소
- 지역 영재교육의 붕괴, 사교육으로 만들어진 영재 양산하는 왜곡된 영재교육을 정상화
- 부모의 경제력이 교육불평등으로 대물림되는 사회적 문제 해결

4

초중고 기초수학을 튼튼히 하여 수학교육을 혁신

현황

- 2020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, 수학 교과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중학교 3학년은 13.4%, 고등학교 2학년은 13.5%로 최초로 10%를 둘 다 넘어간 심각한 수준이며, 이는 2017년에 비해 각각 6.5%p, 4.3%p 늘어난 것, 수학 교과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중·고등학교공히 다른 과목의 2배 정도 또는 그 이상
-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015년에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전국의 7,719명의 초·중·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초등학교36.5% 중학교46.2% 고등학교 59.7%로 엄청난 수포자 비율을 보이고 있음

세부내용

- **수학교육혁신위원회**를 두어 수학 교육정책의 일관성 유지
- 전국 시도교육청에 수학수업지원센터(가칭) 설립하여 교사들의 수업과 연구를 지원, 학교급별 수포자 발생 원인 분석 그리고 이를 해소하는 대안 연구, 학교현장에 반영
- **교육과정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양질의 문제 개발 및 공유. 교사, 학생, 학부모에게 예시 평가 문항 공개**
- 임용고시 출제 방향 및 사범대 수학교육과 커리큘럼 재정비 등 **전문적 교원 양성 제도 구현**
- 학생의 배움 중심의 수학 교과서를 개발하여 학생 스스로 수학 개념을 발견할 수 있는 수업 운영

기대효과

- 암기식 주입식 수학교육에서 수학의 원리를 스스로 발견하고 깨닫는 학생중심의 수학교육 실현
- 수학기초학력 미달자, 수포자 양산에서 수학의 일정 성취도를 책임지는 학교 교육
-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, 수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 풍토 조성
-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를 준수한 문항 출제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

5

교육불평등 해소 법안을 제정

현황

- 불평등 정도를 지수로 표현한 피케티 지수가 2015년 7.8에서 2019년 8.6으로 가파르게 상승, 독일 4.4, 미국 4.8, 프랑스 5.9, 영국 6.0, 스페인 6.6보다 압도적으로 높음.
- 대한민국은 상위 10%가 소득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(한국노동연구원 2019)고 있어 상위 20%가 부의 절반 이상을 소유한 미국보다 더 불평등한 사회로 전락
- 노동시장의 진입단계 뿐 아니라 퇴직단계까지 대학서열에 따른 임금격차 존재해(한국노동연구원 2019)
- 2020 국가장학금 신청자 현황을 살펴보니 서울대 고소득층 비율 62.6%, 저소득층보다 3.4배 높아, SKY도 56.6%로 저소득층보다 2.6배 높음
- 영재학교와 전국단위 자사고 수도권 쓸림 등 특권 고교에도 고소득층 혹은 특정지역 쓸림현상 심각
- 국민 10명 중 9명이 부모의 배경이 교육제도를 통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교육불평등 대물림이 심각하다고 응답(리얼미터 2019)

세부내용

- 교육불평등 지표 및 실태 조사를 법제화
-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
- 정책 추진 및 성과 보고 의무화를 통해 교육불평등 해소의 성과를 국민에게 제시

기대효과

- 경제력과 기득권이 교육제도를 통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불공정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
-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기여
- 과도한 대입 경쟁으로 인한 사교육비 지출 부담의 획기적 완화
- 대학 서열화로 대표되는 학벌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 마련

6

대학입학보장제 3대 입체 전략 추진

현황

- 대학생 10명 중 8명은 고교시절을 대입경쟁 위한 전쟁터로 인식
- 초중고교생의 최근 2~3년 사교육 변화유지(51.8%)+심화(42.8%) 94.6%(KEDI 교육여론조사 2020), 사교육비 지출도 매년 최대치 갱신(통계청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)
- 우리사회에서 대학 서열화에 대한 변화 전망, '변화없음 59.2%, 심화 23.7%, 약화 12.6%', 국민 95.5%가 부정적으로 인식(KEDI 교육여론조사 2020)
- 대학 교육의 정부 재원은 OECD 평균 71%, EU23 평균 78%인데 한국은 38%로서 매우 낮음. 국제경영개발대학원(IMD)와 세계경제포럼(WEF)이 평가한 대한민국 '대학교육경쟁력'은 63개국 중 2019년 55위, 2020년 48위로 최하위권
- 정부 대학지원 '수도권 쏠림' 극심...상위 10개대 40% 이상 차지, 재정지원사업 평균 지원금 수도권 225억, 지방대 121억, 연구개발사업 편중 심각, 서울권 대규모 강세, 지방 사립대 '전멸'

세부내용

- 공모를 통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을 선정
-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대학은 일정 수준의 성적에 이른 학생에게 입학을 보장
- 고교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 방식과 논술형으로 전환하고 두 가지 학업성취로 대입 선발 요건을 마련
-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, 교수 1인당 학생수 OECD 평균 수준 감축, 사업비가 아닌 경상비 지원, 교수 연구비 지원 등 수준 높은 대학교육이 가능한 파격적인 재정 지원
- '고등교육위원회-지역별 대학 혁신 위원회-대학 내 교육혁신위원회'를 통해 자율과 협력적 가치를 통해 대학교육의 발전 유도
- 1단계는 국공립대학 중심(사립대 참여 유), 2·3단계에서 사립대 참여를 점차 확대하면서 대학입학 보장 범위도 점진적으로 확대
- 3단계로드맵에서는 '전공별 인증 학위제', '교육자원의 공유', '모듈형 학점 수강' 등으로 여러 대학의 질 높은 대학교육을 학생들에 제공

기대효과

- 성적 우수학생을 잘 뽑는 경쟁에서 대학에서 잘 가르치는 경쟁으로 고등 교육 패러다임 전환
- 가계 경제 파탄의 주원인인 사교육비 고통 해결
- 고교 교육을 상급학교 입시대비 중심에서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 중심으로 재편 가능
- 대학의 균형 발전으로 지역인재가 정주해서 살 수 있는 고등교육 환경 조성

7

공정 채용 끝판왕

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

현황

- 통계청의 2009-2013년 5년 연속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자녀들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제 1이유를 '채용 단계에서 출신학교를 중시하기 때문이다'라고 응답하여, 학력(學歷), 학벌 문제가 심각한 사교육 유발 요인임이 확인됨.
- 채용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출신 학교 정보
 - 2017년 고용부와 대한상공회의소의 506개 기업 인사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가장 중시하는 것이 직무 적성(75.1%)이었고, 학력은 불과 1.2% 정도였음에 비해, 학력 기재를 요구하는 기업은 86.9%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음. 직무능력과 학력이 완전히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업은 관행적으로 학력 정보를 요구함.
 - 하나은행, 신한은행, 서울대학교 병원, 연세대·고려대 의료원 등은 채용 과정에서 출신학교별로 점수를 차등부여 하는 출신학교 등급제를 활용하여 고용정책기본법,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위반한 바 있음.
 - SKY>인서울>지방거점국립대학>지방사립대 등의 대학서열에 의한 기업의 차별 채용 관행은 지역인재의 수도권으로의 이탈, 지방대 경쟁력 약화, 지방 공동화 등의 악순환을 초래함.
-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신뢰회복과 공정한 인재 선발의 기반
 -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특권 대물림 교육 해소 방안으로 77.4%의 국민들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
 -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 중인 공공기관 340여곳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2020년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, 블라인드 채용 도입으로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고, 상사, 인사담당자, 신입사원 모두 공정성 및 절차적 투명성이 증대되었다고 평가하였음.

세부내용

- 학력해소를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
 - 입시와 채용에서 출신학교 정보 블라인드
 - 학벌 차별 -상급학교 진학시 출신학교 후광효과 차단
 - 공공부문과 일반기업 모두, 고용 전 과정에 적용
 - 합리적인 이유없이 학력·출신학교를 이유로 우대·배제 금지
 - 기업의 직무역량 중심의 공정채용 정착

기대효과

- 학력·학벌로 인한 패자가 없는 사회
- 입시 위주의 교육을 탈피하여 아이의 개성과 적성에 맞는 교육으로 전환
- 불필요한 경쟁 억제로 사교육비의 획기적인 경감
- 학벌 효과의 감소로 선발 점수로 서열화 된 대학체제 완화
- 학력 인플레 현상 완화 및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 해소
- 구시대적인 학력·학벌 프레임을 벗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체제로의 이행기반 마련

8

임금 격차 및 임금 불평등 해소

현황

- 권오현 삼성전자 회장의 2017년 연봉은 243억8100만원(삼성전자 사업보고서)으로 삼성 일반직원 평균연봉(1억1700만원)의 208배였음. 또한 2017년 최저시급(6470원)을 받던 노동자의 월급여를 연봉으로 환산해 비교해보면 무려 1503배에 달함.
- 148개 대학을 5개 분위로 나뉘었을 때 노동시장 진입 단계 ~ 퇴직단계에 이르기까지 대학서열별 임금 격차가 존재. 노동진입 시에는 5분위 대학 졸업자들이 1분위 대학 졸업자들에 비해 14%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이 격차는 40~44세에 최대치인 45.5%를 보임. (이지영외, 2019)
- 저성장시대로 접어들며 계층사다리 역할을 해야할 교육조차 계층재생산 및 임금 불평등의 수단이 되고 있음. 출신학교 외에도 고용형태, 성별, 원하청 관계, 기업규모별, 직업별 임금 격차 또한 심각함.
-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소득불평등도는 7번째로 높은 수준임. 이는 다른 대부분의 OECD 국가보다 임금격차가 크고 소득 재분배는 제한적인 것에서 기인한다고 밝힘. (2020 OECD 한국경제 보고서)
- 불평등 상황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. 재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서민과 저소득층임.

세부내용

- 임금격차해소를 위한 임금분포공시제(현행 임금직무정보시스템)의 실질적 상용화
 - 고용형태, 성별, 학벌, 학력, 원하청 관계, 기업규모별, 직업별 임금 정보 공개
 - 기업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현황을 위한 기업임금보고서 제출 제도화
-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화
 - 고용형태, 성별, 학벌, 원하청, 기업규모별 불합리한 임금격차 및 불평등 문제 해소
- 최고임금상한제 도입(한국판 살찐고양이법)
 - 공공기관, 법인, 민간기업의 경영자 및 임원, 고위공무원 임금의 상한제를 도입
- 국민의 삶의 질 보장 및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공정임금관리기구 신설
 - 임금 격차 및 불평등의 원인 진단, 계획 수립, 개선
 - 동일노동 내 임금격차 발생시 조정
 - 불합리한 임금 발생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
 - 임금체계 대안 모색
 - 직업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치,운영

기대효과

- 경제적 불평등의 가속화로 인한 교육경쟁 완화 및 사교육 고통 해소
- 소득 불평등 완화를 통해 전 국민 삶의 질 향상
-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 완화 및 노동의욕 고취

9

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과잉교육 예방 및 보육교육체제 개편

현황

- 만 5세 유아의 83.6%가 사교육을 받는 등 영유아 사교육이 급격히 확대됨.
- 서울시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월평균 총 학원비는 우리나라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(667만원)의 2배에 가까운 비용, 교습 시간은 하루 평균 4시간 51분(74교시)으로, 중학생과 동일함. 대표적인 프랜차이즈인 P학원의 7세(3년차) 교재를 살펴보니, 읽기 난도(렉사일 지수)가 중1 영어 교과서 수준이었음
- 생애 초기 불평등, 사는 지역과 어린이집-유치원 기관유형 선택에 따라 생애 초기 불평등이 시작. 보육과 교육 행정 이원화에 따라 교사양성과정, 지원금액, 시설 모든 방면에 편차게 발생하고 있음
- 프랑스, 미국 등에서는 의무교육제도의 도입을 통해 학제를 확대하여 교육기본권을 확보하고, 평등한 유아교육과 보육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추세임

세부내용

- 적기교육의 확산, 놀 권리 보장 제도와 이와 관련한 학무모교사 의무 연수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영유아 보장 체계 마련
- 과도한 영유아사교육제한
- 0-5세 발달에 대한 전문 지식과 태도를 갖춘 교사가 영유아를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주도 보육·교육체제 개편 시스템을 마련해 영유아 발달, 놀 권리 보장
- 교사대 아동비율 축소, 교사 전문성 향상, 양성과정 개편, 기관 지원 및 관리의 일원화 및 자원 확보

기대효과

- 영유아 시기의 지나친 사교육을 제한, 적기교육의 중요성 및 놀이의 필요성을 확산함으로써 영유아 건강과 발달 보장
- 영유아 발달전문가 양성과 이를 교원으로 임용하는 등 국가적 체계를 마련 사교육 없이 유치원, 어린이집만으로도 충분한 유아교육 구축

10

'국가 사교육 관리센터' 를 설립, 해로운 3대 사교육을 근절

(과잉선행, 불철주야, 고액부담)

현황

- 2019년 초·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1조원으로 국가 교육예산(60조원)의 1/3에 달하고, 월소득별 1인당 월평균 교육비는 최소(200만원 미만)-최대소득(700만원 이상) 간 5배 차이(교육부, 통계청 2020)로 사교육이 가계 노후부담, 교육 불평등 및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
-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사교육비 조사 통계치는 실제 사교육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것이 중론
- 현행 선행교육금지법은 공교육에서의 선행교육만 금지하고 있어 사교육은 선행교육의 사각지대로 방치
- 현재 교육부는 불법사교육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교습비초과징수, 교습시간 위반, 무등록영업 등을 신고 받아 단속하고 있으나, 사교육 이해당사자인 학부모로부터 신고되기 어려운 구조
- 사교육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책 마련이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학부모들은 막연한 불안감 속에 사교육 소비

세부내용

- **국가 사교육 관리센터 설립**: 시도교육청별 사교육비 절감 성과평가 강화, 탈·불법적 사교육 기관의 관리 강화
- **사교육비 통계 현실화**: 교육부통계청의 '사교육비 조사' 재편, 사교육의식조사 재개를 통해 정확한 사교육 실태 진단 및 대책 수립
- **과잉선행 사교육 근절**: 사교육 기관에서 학교 교육과정에 앞선 과도한 선행상품 판매 행위를 근절하도록 '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' 개정
- **불철주야 사교육 근절**: 학원휴일휴무제 도입 및 사교육 심야교습 제한시간을 초·중고 학교급별로 설정
- **고액부담 사교육 근절**: 교육청에 신고한 교습비 이상으로 초과 징수하지 못하도록 삼진아웃제 도입

기대효과

- 사교육에 대한 정확한 실태진단을 통한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확한 사교육 대책 수립기반 확보
-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하는 사교육으로부터 보호하고 학생의 건강권, 여가권 보장
-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가계부담 및 학부모 노후부담 개선
- 공교육을 정상화 및 사교육 과열 현상 완화
- 사교육비로 인한 교육불평등 및 사회 양극화 해소

11

국가교육위원회에 학생행복전문위원회 설치

현황

- 2015년 자료에 따르면 중고교생 자살자들이 겪었던 고민으로 가장 높았던 것은 학교 성적 문제로 26.8%
- OECD 학생 삶에 대한 만족도 35개국 중 34위, 한국 학생들의 행복도는 조사대상 72개국 나라 중 꼴찌에서 두번째
- OECD 2017년 4월 발표한 학생들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한국 학생 75% 성적스트레스를 호소
- 정신과 전문의 10명, 청소년 우울증을 앓는 환자 중 30~60%는 사교육 압박을 받고 있음
-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자살 중 원인미상의 보고된 비율이 가장 높음. 입시경쟁 등 청소년의 정신적 어려움을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책임과 의무를 국가에 부여할 필요가 있음

세부내용

- 2022년 국가교육위원회가 새롭게 설치되고 우리사회 굵직한 교육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
- 국가교육위원회에 상설 전문위원회로 학생 행복 전문위원회 설치 필요함
- 학생들의 행복, 스트레스 지수를 매년 조사 하고 그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기 위한 계획 및 대안을 공표
-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수면시간, 여가시간, 학교외에서의 학습시간 등을 지표로 개발
- 국가교육위원회는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조사한 데이터와 실태 등을 반영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

기대효과

- 학생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임을 실태조사와 공표를 통해 재정의함
- 한번도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학생 심리와 스트레스에 대해, 국가가 나서서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한 구조를 구축
- 학생들의 병리적 문제를 중요한 교육정책 수립에 반영하여 본질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함